

# 주류 쌍벌제 유지... 술잔·앞치마 등 사은품은 허용

## 국세청, 주류 고시 개정안 큰 폭 수정

국세청이 업계의 반발로 보류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수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유지하되 '대여금' 항목은 제외하고 '동일시점 동일가격 판매' 규정을 완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기한 '주류 고시 개정안'을 수정한 '건의 사항 반영분'을 새로 제시했다.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개정안에는 핵심이었던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쌍벌제 도입은 유지됐으며, 대여금 및 주류 판매 필수 장비 제공 등 주류 관련 협회가 요구한 내용은 대부분 반영됐다. 이번 안은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유흥음식업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이 제시한 '행정예고 후 건의사항 반영분'에는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광고용 소모품' 가액 한도 폐지 ▲RFID 적용 주류의 주종별 시음 주물량 한도 적용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근절하지는

## 관련 협회 요구내용 대부분 반영 권익보호·편익증대에 초점 맞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협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 등 시장 참여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의 편의 증대라는 데 기본 방향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건의사항 반영분'을 살펴보면 당초 개정안의 '장려금·수수료·대여금(도매상들이 자영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에너지·할인·외상 등을 제공해선 안된다'는 문항에서 '대여금'은 제외됐다. 이는 대여금도 제공하지 못하게 할 경우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마련 기회를 박탈해 외식산업 진입에 장벽이 발생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던 냉동고와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지원이 금지됐으나 수정안에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인 생맥주 추출기 등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모품 가액 한도 5000원 조항'도 폐지했다. 국

세청은 제조사의 영업활동 위축과 소상공인의 지원폭 축소를 모두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의사항 반영분대로 재개정이 이뤄진다면 향후 제조사는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술잔, 앞치마, 얼음통, 오프너는 물론 생맥주 추출기 등을 현행처럼 제공할 수 있다.

시음주도 'RFID 적용 주류'에 대해 맥주와 소주처럼 위스키와 기타주류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시음주도 'RFID 적용 주류 1800병'을 허용했으나 수정분에는 위스키와 기타주류 각각 1800병으로 수정했다.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도 낮아졌다. 하지만 ▲내부사 결정 절차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구입 가격 이상으로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는 원칙은 개정안과 같다.

수정안에 따르면 수입상품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구입 가격 미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 악용 소지가 있어 내부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넣었다. 또한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저가 납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용도별' 대신 '소매 면허 종류별'로 판매가격을 결정해 골목상권과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수입업자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판매가격 결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수정안은 제조사와 50억 이상 수입업자와 50억 미만 수입업자로 나눠 판매가격 결정을 달리했다. 제조사와 50억 이상 수입업자는 동일한 지위의 도소매업자 별로 각각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50억 미만 수입업장의 경우 도매업자에게는 구입가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판매가를 결정하되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이 건의사항 반영분을 수용하면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도 "이번 개정으로 주류업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적극 공감한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편... 보안 규제 혁신”

## 정보보호의 날 기념 초청 세미나

### 최종구 금융위원장

### 혁신 추진 위해 위험요소 살펴봐야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 플랫폼, 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혁신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 하는 보안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PISP)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에 심의중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과 함께 시행하게 되면, 정보보호와 금융보안이 완비된 디지털 금융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혁신금융 서비스의 성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 금융혁신이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날 최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살펴야 할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산업구조·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증폭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국민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과 정보통신기술간 빅블러 현상(경계 없이 넘나드는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으로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에 따라 도출되는 자동화된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이의제기 등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금융사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근절을 위해 일차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도 통신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작년말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금융사기 정보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중 안전한 먹거리 눈 떠... 수입통관 거부 ↑

중국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성에 눈을 뜨면서 안전한 먹거리로 중국 식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의 '중국 식품 안전규정 강화에 따른 한국 식품기업 수출전략'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우리나라 식품의 중국 수입통관 거부 사례가 617건이었다. 2016년에는 161건이 통관 거부됐지만 2017년에는

399건으로 급증해 수입식품 통관 거부국 6위에 올랐다. 2018년에는 46건, 올해는 11건이 통관 거부됐다.

이는 중국이 그만큼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식품 수출의 15.9%, 12억46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식품안전

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국무원이 '식품안전 관리규정 강화계획'을 발표하는 등 식품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도 2016년 3042건에서 2017년 66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년 1351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478건을 기록 중이다.

중국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바이두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10대 검색 키워드 중 '식품 안전'이 5위에 올랐다. 검색량의 90%가 20~40대였다. /배한남 기자

# 신한생명, 환경경영체제 'ISO 14001' 획득

## ISO 제정 관련시리즈 최고 레벨 인증

신한생명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 관련 시리즈 중 최고 레벨에 해당되는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O 14001' 인증은 환경 기반의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그룹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에 발맞춰 환경경영시스템(EMS)을 통한 환경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를 '친환경 경영의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가 친환경 경영활동에 함께하는 환경경영 방침을 제정했다. 회사 내 모든 업무에 환경을 고려하는 프로세스를 반영한 환경경영체제도 구축했다.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임투자(SRI) 펀드와 연계된 변액보험 판매도 힘쓰고 있다. 전자청약, 모바일 앱(App) 스마트 창구, 페이퍼리스(paperless) 오피스, 사무자동화(RPA) 시스템의 업무 적용 범위를 넓혀 종이 사용량은 줄이고 친환경 업무 프로세스는 대폭 확대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다양한 사업에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ISO 14001'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책임의식을 갖고 환경경영 알리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해변에서 만나는 우리은행... 이동점포 운영

우리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점포 '해변은행'을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변은행의 운영기간은 오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현금입출금과 이체 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제22회 보령머드축제' 기간인 오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계좌신규, 체크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이동점



포는 자체 발전설비 및 위성 송·수신 장비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특수 차량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여름 휴가철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 환전 이벤트'를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홍민경 기자